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서

2024년 1월 9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민일보	14면	평창 대관령면 신년교례회	1
설악신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신년사[1/3]	2
강원도민일보	04면	군 "남북 적대행위 중지구역 사라져"...접경지역 불안 고조	5
강원도민일보	05면	외국인력 의존도 높은 어촌 "월 400만원 줘도 안 와" 울상	5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내 5개 시·군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	6
江原日報	04면	강원지역 초교 입학생 1만명 무너졌다	7
강원도민일보	14면	영월문화관광재단 조직 개편 실효성 논란	8
강원도민일보	11면	국제스케이트장 강릉경기장 활용 목소리 확산	8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시 문화·관광분야도 외부영입 나선다	9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도전	9
강원도민일보	14면	정선군, 인구소멸 극복 '마을활력 공간' 조성	1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착한가격업소 디지털 홍보 강화해야	1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폐광지 산업 활로 찾는 한해로	12
江原日報	19면	[사설] 잇따른 겨울철 안전 사고, '안전시스템' 풀리고 있나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용문~홍천 철도, 지방소멸 막기 위한 '국가 인프라'	14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9일 (화)

지역 14면



평창 대관령면 신년교례회 평창 대관령면의 신년교례회가 8일 오전 대관령면 눈마을예식장에서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최종수 도의원, 신양문 대관령면장, 박정우 면보영회장,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년 01월 08일 (월)

기타

설악신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신년사

김시성 도의원(속초)

"많은 예산 확보 노력...살고 싶은 속초 만들 터"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으로서 우리 속초시와 중앙정부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4선 의원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북양양IC와 떡발재를 바로 잇는 교량 건설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세계 최고의 명산 설악산과 설악동의 명성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선거 당시 약속드린 속초시 남부권인 노학, 조양동의 소방센터 신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 재정적 지원은 약속받았고, 부지 선정 절차만 남아 있으므로 더 서두르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도와 속초시와 함께 노력하여 2024년 연말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 사업은 우리 속초시의 미래를 바꿀 중차대한 국책 사업입니다. 조기 완공과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양수 국회의원과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속초! 살고 싶은 속초!를 만들겠습니다.

강정호 도의원(속초)

"속초시를 교통·관광·의료 허브도시로"



2024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속초시의 미래를 바꿀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의 본격적인 보상과 공사가 시작됩니다. 2027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양공항의 정상화와 얼마 전 재개된 북방항로의 활성화를 통해, 육로와 하늘길, 바닷길을 갖춘,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도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영랑·장사의 고도제한 해제는 국방부의 용역 착수라는 희소식이 있습니다만, 긴장을 놓지 않고 해제되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를 설득해 공약으로 선택한 북양양IC와 떡발재연결도로 개설, 도교육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낸 속초중학교 이전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이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 특히 이양수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속초시를 강원특별자치도의 교통, 관광, 의료의 허브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오직 속초시민들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의 마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의원(고성)

"농림어업 예산 확보·신규 정책 발굴"



푸른 청룡의 힘과 풍요로움을 품은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우리 강원도 발전을 억압해 오던 4대 규제가 드디어 풀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는 고성군과 관련 있는 군사·농업·산림·환경 규제 해소를 위해 특별자치도의회의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발 빠르게 나설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작년 우리 농림 어업은 도정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삭감 속에서도 농림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민생 예산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성농어업인들을 위한 예방접종·복지바우처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예산, 어로안전 항해장비,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체감형 사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올해는 상반기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해인 만큼, 고성군을 비롯한 설악권 농림어업인들의 위해 예산확보 및 신규 정책 발굴 등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슬로건인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을 바탕으로 고성군민과 도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진종호 도의원(양양)

"글로벌 거점도시 발돋움 정책 구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인 갑진년 청룡의 희망찬 새해를 맞아 우리도가 글로벌 거점 광역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들을 더욱 발굴해 현장에 반영하는 도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양군과 강원자치도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을 지원해 시너지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공사가 본격화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산악관광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새해는 양양국제공항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해 여객과 화물이 균형을 이뤄 환동해 거점공항으로 국제선 다변화를 이뤄내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 우리 양양군이 처음으로 여는 제59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낙산지구와 서핑해변 등 특화지구에 대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청년 고용 등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인 연어산업화도 강화해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헌신하겠습니다.

원미희 도의원(비례·속초)

"웰니스 관광도시 성지 기틀 마련"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원년으로 가족돌봄청년지원조례,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등 조례의 제·개정, 사회문화위원회 상임위활동 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 통합보건의료복지의원연구회, 수소차 충전소, 달마봉 법정탐방로 지정 등 현안문제 이슈화 활동으로 제4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강원특별법이 2024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산림·환경·국방·농지 4대 핵심규제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되어 도 면적 81%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관광 등 신산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아래 첨단 미래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가 추진하는 5대 권역별 첨단산업 중 설악권역은 스마트관광이 신성장 산업이며, 5대 관광벨트 중 해양설악권역에 속하여 관광산업이 제1의 역점사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새로운 트랜드의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설악산, 동해바다, 호수, 온천 천혜의 자원과 함께 맨발걷기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기체류 관광은 물론 인구가 유입되는 웰니스 관광 도시 성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지영 도의원(고성, 비례)

“각종 규제 감내한 온당한 보상 있어야”



승천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는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를 맞아 비상하는 청룡의 힘찬 기운처럼 더 큰 도약과 함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는 우리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았던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새롭게 출범된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한 희생과 강원도민들의 헌신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고성군을 비롯한 설악권 주민들께서는 군사, 산림, 농업, 환경 등 다방면에 걸친 규제를 감내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악권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온당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우리 설악권의 현안 중 하나인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동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례안 발足を 비롯한 설악권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에도 우리 설악권 주민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설악관 발전에 ‘화룡점정(?龍點睛)’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군 “남북 적대행위 중지구역 사라져”... 접경지역 불안 고조

2024년 01월 09일 (화)

종합 04면

북, 사흘 연속 서해 완충구역 사격
9·19 군사합의 백지화 갈등 양상
안보관광 피해 등 생계위협 우려

북한이 서해 NLL 상으로 포 사격을 감행하면서 9·19 군사합의가 5년여 만에 사실상 백지화, 남북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강원도가 또 다시 남북 대립의 한복판으로 빠져들고 있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훈련을 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뤄진 후 1년 1개월 만이다.

또 최근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600회 위반, 군도 더 이상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구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해왔다. 또 지상에 서 총 10km(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각각 5km)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해왔다.

하지만 결국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고 사격을 진행하자 우리군은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남북 관계가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2022년 11월 북한의 동해상 탄도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불안감은 물론 생계의 위협까지 받은 동해 접경지 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당시 강원도내 접경지역 안보 관광이 폐쇄되면서 고성 통일전망대는 물론, 철원 민통선 내 DMZ 생태평화공원도 잠정 운영을 중단하면서 관광업을 하는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기 때

문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사태가 확산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

한명철 고성군변영회장은 “2022년에도 같은 일을 겪으면서 이번 서해쪽에서 발생한 북의 포격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관광지인만큼 유사한 일이 생기면 생계는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해쪽에서도 북한의 포격이 이어질까 조마조마하다”고 답했다.

신재훈

강원도민일보

외국인력 의존도 높은 어촌 “월 400만원 쥐도 안 와” 울상

2024년 01월 09일 (화)

사회 05면

르포 | 고령화 직격탄 맞은 강원 어촌계

어부 평균 나이 65세 ‘홀췌’

종사자 80% 이상 외국인 차지
“한철장사 장기고용 부담” 토로

지난 7일 오전 강릉 주문진동의 한 조업장. 어빈기막바지에 접어들어 날 올린 그물에서 양미리를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단순작업을 하는 20~30대 베트남·태국 출신 노동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 조업장 종사자 30여명 중의 국인은 무려 25명, 80% 이상이다. 반면 조업장을 운영하는 황왕일(60) 선장을 비롯한 주문진 일대 한국인 어부들은 평균 65세 이상. 이 지역 조업장 20여 곳 중 40대 이하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1곳뿐으로 파악됐다.

초고령화된 강원지역 어촌계가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조업특성과 시기에 따른 업종 변경이나 이직이 매우 잦아 현장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만난 황왕일 선장은 “한국 사람들은 4대 보험에 속식까지 제공해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다”며 “외국인에게

월 400만 원에 숙식도 제공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이 뒷돈을 얹어서라도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 외국인들도 그에 따라 이동하니 고용상황이 엉망진창”이라고 토로했다. 전용철(53) 선장도 “인력난을 잘 아는 외국인들이 급여 인상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귀어 4년째인 정기영(55) 선장은 “일대의 젊은 인력은 전부 외국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성 있는 젊은 선장은 차치하고 기본 작업자에도 한국인이 없다”며 “70대 부부 선주들도 있는데 이들이 언제까지 더 일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현재 주문진 지역 외국인노동자는 260여명(단기 200명·고정 60명)으로



지난 7일 강릉 주문진 일대 한 조업장에서 단기 외국인노동자들이 어선을 기다리고 있다.

강주영

추산된다. 반면 도내 어업종사자 중 청년(만 19~39세)은 2019년 576명에 서 지난해 423명으로 최근 3년 새 153

명 줄었다. 정 선장은 “여기 사는 외국인 고정인력 60명의 숙식을 모두 어민들이 책임지고 있다”며 “어촌 수익구조

는 한철장사인데 외국인 장기 고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했다.

강주영 jjuyo9642@kado.net

2024년 01월 09일 (화)

종합 02면

江原日報

강원자치도 내 5개 시·군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

태백 市지역 중 전국 유일
지역소멸 위기 대책 절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명이 채 되지 않은 시·군이 5곳에 달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도내에서 단 한 곳도 없었으나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본보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 100명 미만인 강원자치도 내 지자체는 태백, 평창, 정선, 고성, 양양 등 5개 시·군으로 집계됐다. 경북·경남(각 7곳)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충북과 전남도 각각 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양양의 출생아 수는 78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었다. 이어 고성 86명, 평창 92명, 정선·태백 각 93명 등이었다. 태백의 경우 전국 시(市) 지역 중 유일하게 100명을 넘지 못했다. 태백은 2021년 131명, 2022년 129명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감소세다.

도내에서는 2017년 양양군이 처음으로 출생아 수 100명 미만을 기

록했고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2개, 2021년 3개, 2022년 4개로 매년 증가세다.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사망자 수와 전출인구는 늘고 있다. 태백의 사망자 수는 2021년 377명에서 2022년 491명으로 증가했으며, 800명의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정선의 사망자 수 또한 전년 대비 25명 늘어난 447명에, 290명의 인구 순유출을 보였다.

태백과 정선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본격화한 1989년 이후 폐광의 영향으로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열악한 교통망과 인프라 등까지 더해져 지역민들이 타 지역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등 지역소멸이 현실화될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재훈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생아 수 감소 지역은 문화·경제·의료·교통 등 대부분의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정부의 정책 대안과 함께 인구소멸 지자체들 간 연대를 통한 지역 자산 발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江原日報

2024년 01월 09일 (화)

사회 04면

강원지역 초교 입학생 1만명 무너졌다

(공립)

올해 강원지역 공립 초등학교 입학 예정아동 수가 1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공립 초등학교 입학예정자가 1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사상 최초다.

8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에 따르면, 도내 364개 공립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은 9,8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만1,047명에서 1,223명(11.1%) 줄어든 인원이다. 도내 취학 대상 아동 수는 2022학년도(1만1,960명)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타 지역 전출이나 입학 유예, 해외 유학 등의 사유가 추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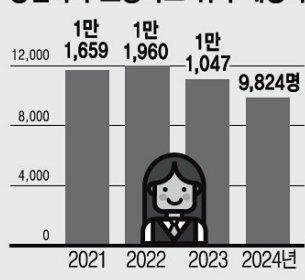
통계 집계 2005년 이후 사상 첫 도교육청 예비소집 결과 9,824명 2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셈 출산율 감소 학령인구 절벽 심화

할 경우 실제 입학생은 이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 첫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5년 공립 초등학교 입학생 1만9,210명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도내 출산율이 해마다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전체 초교 입학생 수도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를 밑돌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

강원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된 이번 예비소집에는 취학대상 아동 9,824명 중 9,051명(92.1%)이 참여했다.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은 773명이었다. 불참 사유는 '전출예정'이 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면제(165명), 해외거주(129명),

입학 유예(33명) 등의 순이었다.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4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춘천 6명, 원주와 강릉에서 각각 2명, 동해·태백·홍천·인제에서 1명씩이다.

도교육청은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방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행정과장은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재를 파악해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강동취기자 yulny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9일 (화)

지역 14면

영월문화관광재단 조직 개편 실효성 논란

1년만에 1본부 1센터로 변경
공무원 파견 증가·팀장급 계약직
재단 “행정지원 연계 강화 개편”

영월문화관광재단(대표 김성민)이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나 공무원 파견이 늘어나고 문화도시본부와 문화도시센터로 회귀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재단은 문화도

시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명분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1년여 만에 기존 문화도시본부와 관광축제본부 등 기존 2본부 조직에서 1본부와 1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문화도시본부의 문화도시부와 문화예술부, 관광축제본부의 관광자원개발부와 관광축제부 등 4부는 기획총무부와 문화예술부·관광축제부·문화도시센터 등 3부와 1센터로 분리됐다.

그러나 지난 1일자 군청 인사를 통

해 기존 공무원 2명 파견에서 3명으로 늘어난 데다 관광축제부에는 똑같은 3급 부장이 2명이나 배치됐다.

또 관광축제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광자원개발부가 맡고 있던 동강뱀목축제를 문화예술부에 맡겼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정원은 기존 조직과 동일한 19명이지만 문화도시센터에 전문직 팀장급 1명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무원 파견을 늘리는 것은 재단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데다 재단 직원의 내부 승진 기회를 차단시켜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 관계자는 “행정지원 협의체와의 사업 연계 강화, 문화도시 브랜딩과 함께 문화도시사업 이후의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개편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기준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9일 (화)

지역 11면

국제스케이트장 강릉경기장 활용 목소리 확산

지역사회 경기장 재활용 촉구
“대체시설 건립시 경제적 손실
부지공모 철회 등 재검토를”

속보=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훈련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공모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을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본지 2023년 12월 21일자 4면)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

역사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동해안 도시발전연구회(대표 박홍식)와 강릉사랑시민연대(대표 기세남)는 8일 강릉 스케이트장 재활용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장과 인프라를 갖춘 강릉 경기장을 놔두고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며 “현재 부지 선정 단계라 강릉시 스케이트장 재활용에 대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지자체들을 출혈 경쟁으로 내몰지 말고 재숙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강릉시빙상경기연맹은 청와대 국민동의청원에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부지공모 철회 및 강릉 경기장 활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게시했다.

박용근 강릉시빙상경기연맹회장은 청원을 통해 “2018 동계 올림픽 당시 만든 강릉 스케이트장은 국제경기를 치르기도 남을 만큼의 완벽한 시설”이라며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다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며, 강릉 경기장을 국제스케이트장으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릉시의회는 지난 달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문’을 채택,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시의회는 “강릉은 이미 수도권과 만나질 생활권이고, 내년에 예정된 부산-강릉 간 철도 개통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대체시설 건립이 아니라 국제경기가 가능한 강릉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제 dusdn256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9일 (화)

지역 09면

춘천시 문화·관광분야도 외부영입 나선다

시, 개방형 공모 도입 분야 확대
“현안 해결에 외부 전문가 필요”

보건소장·공보담당관 물색 과제

춘천시가 보건·공보·관광 등 전문 분야에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 외부 전문가들을 채용하기로 해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이번 달부터 각 분야별로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직책은 보

건소장과 공보담당관이며 문화유산과 관광마케팅 분야도 개방형 공모로 책임자를 찾기로 했다.

이미 춘천시는 지난해 말 춘천시보건소장 개방형 공모 공고를 내고 외부 인재 영입에 나섰다. 춘천시보건소장직의 경우 지난해 6월 당시 보건소장이 직위해제된 이후 6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 공보담당관 역시 이달 말 장기교육이 예정돼 있어 후임자 물색이 시급하다. 춘천시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형 공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러 분야에 걸쳐 개방형 공모제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춘천시는 보건소장이나 공보담당관 등 특정 분야에 한해서만 개방형 공모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문화유산이나 관광마케팅 분야까지 범위가 확대된 점은 시정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춘천시 관계자는 “보건이나 공보, 관광, 문화유산 등은 일반 공무원들이 깊이 있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분야”라며 “민선 8기 춘천시정의 지향점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힘을 보태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민선 8기 춘천시가 개방형 공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책임자 찾기가 과제로 떠올랐다. 당장 춘천시보건소장 공모의 경우 지난 두 차례 모집에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 40시간 근무에 연봉 하한선을 6450만원으로 책정, 같은 직급과 비교해 처우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춘천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들 보면 역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못 구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처우가 적절한 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9일 (화)

지역 10면

원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도전

교육지원청 협력 추진단 구성

돌봄체계·산업연계 과제 발굴

기관·단체 협의체 결성 추진

원주시와 원주교육지원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원주형 모델 개발에 나섰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부 공모사업 중 하나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간 협업해 지역 교육 혁신, 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 조성을 종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위해 지방정부의 교육정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특성·여건을 반영한 각종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 추진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많은 지자체가 도전장을 냈다.

시와 교육청도 이달 초 ‘원주 교육발전특구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단은

돌봄체계 구축, 교육환경 구축, 지역 산업 연계, 혁신도시 연계 등 분야별 과제를 발굴, ‘원주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개발한다. 여기에 오는 11일에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 공공기관, 기업체 등 20여 곳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프로그램을 원주형으로 특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을 도모한다. 글로벌대학 30에 선정된 강릉원주대를 비롯해, 지역 대학이

가진 자원을 시의 AI반도체 산업 또는 디지털 교육 전환기를 맞은 교육청과 연계, 현장 중심 교육을 지원한다. 지역 전략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에 AI반도체 분야를 접목한 보건·의료 분야 특화사업도 발굴한다. 이외에도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원강수 시장은 “지역 내 여러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원주만의 특화 모델을 개발, 시범지역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9일 (화)

지역 14면

정선군, 인구소멸 극복 '마을활력 공간' 조성

북평면 일원 공유 오피스 등 구축

농기센터 연계 창농프로그램 운영

정선군은 지역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력 공간 만들기에 나섰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군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35억원을 확보, 북평면 일원에 특산품 홍보 스튜디오와 공유 오피스 등 다목적 공간 및 공동체 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Young;농 플랫폼-홈'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 실시간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랩'은 북평리 750-31번지 유희건물을 활용해 21억원을 들여 연면적 478.8㎡ 규모로 리모델링한다. 1층은 오픈라운지와 공유오피스, 2층은 라이브커머스 및 영상 제작 공간으로 조성해 온라인 판로를 구축하고 주민 소득 증대와 청년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농기술 습득, 귀농 입문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정착 지원 등 창농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주



정선군은 북평면 일원에 다목적 공간 및 공동체 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Young;농 플랫폼-홈'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 휴식과 문화향유 공간으로 조성되는 모두랑센터는 북평리 693-8번지 일원에 35억원을 들여 대지면적 1375㎡, 연면적 800㎡, 지상 2층 규모로 어린이 놀이방, 작은 도서관, 공동체 사랑방으로 조성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11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건희 기획담당관은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자녀를 낳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목표"라며 "생활SOC 조성과 지역주민의 상생·화합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정선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9일 (화)

사설/칼럼 19면

착한가격업소 디지털 홍보 강화해야

-물가모니터링단·주민자치위 추천 발굴제 병행 필요

고물가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가격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시군에서 신년도 '착한 가격 업소' 선정에 들어갑니다. 시군에 따라 추진 일정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선정 방식은 대개 업소 신청제입니다. 시군이 모집 공고를 내면 업소에서 신청한 뒤 시군에서 평가표에 의해 심사를 거쳐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고령의 운영자 및 1인 경영으로 운영되는 개인서비스업계 사정을 고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려면 업소 신청제와 병행해 평가를 담당하는 물가모니터링단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추천 발굴하는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비목 중 가장 기초적인 식비조 차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기에 착한 가격 업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도입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설 개선 비용과 공공요금 지원, 표창 부착 등의 혜택이 있는데 올해는 지원액이 상향돼 관심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한 가격 업소 정책 대상인데도 업소 신청제로만 진행할 경우 사각지대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추천제 병행이 바람직합니다. 지역 요금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와 물가모니터링단 그리고 가게 정보에 밝은 같은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꾀해야 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파급효과를 키워야 합니다.

또한 착한 가격 업소는 그 지역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만큼 지속해서 유지되려면 다액 매출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돼야 합니다. 그러자면 현재의 시군청 홈페이지나 별도 사이트에 게시해 홍보하는 방식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일일이 사이트를 찾아 검색하지 않아도 대형포털의 지도와 길 찾기 등에서 착한 업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홍보를 다각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관광산업이 주력인 강원은 외부인들이 방문에 앞서 업소 정보를 검색하므로 욕구에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실효적입니다. 업소 지원 방식도 획일적이지 아니라 환경과 필요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고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이어야 물가 안정 파급효과 내는데 유리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09일 (화)

사설/칼럼 19면

폐광지 산업 활로 찾는 한해로

-장성·도계광 잇따라 폐쇄, 성장 동력 찾아야

산업화 시대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도내 광업소가 잇따라 폐쇄하면서 지역 공동화가 가속할 전망이다. 올해엔 태백장성광업소가, 내년엔 삼척 도계광업소가 잇따라 문을 닫습니다. 연쇄 폐광에 따라 일자리 소멸과 지역 상권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급격한 인구 유출이 예상돼 지역 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과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지역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자체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합니다.

폐광에 따른 피해 규모는 지난해 실시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태백시 3조 3000억원, 삼척시 5조 6000억원 등 모두 9조원에 육박합니다. 또한 도내 2개 지역에선 25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업소 종사자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을 떠난다면 인구 유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태백 유일의 대학인 강원관광대의 폐교 움직임이 본격화해 폐광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대와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최근 내부 전산망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간호와 재학생 전원에게 충북 음성군 소재 '강동대학교'로의 편입 추진을 통보

하고 찬·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폐교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은 지속해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태백시와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 시현안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말 장성광업소 보존 및 대체 산업 추진 위원회를 발족하고 상생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태백시는 장성광업소 폐광 대비 지역의 전략 사업으로 미래자원 클러스터 조성 등 4개 사업에 총 5219억원이 투입되는 경제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회생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힘만으로 광업소를 대체할 만한 산업을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교통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도내 폐광지역은 '교통 불모지'로 불릴 만큼 접근성이 열악합니다. 수도권과의 도로 통행 시간은 3~5시간에 달합니다. 철도와 도로 확충을 통해 교통망을 개선해 산업과 관광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폐광지역 공동화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인구와 도세를 악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09일 (화)

사설/칼럼 19면

잇따른 겨울철 안전 사고, ‘안전시스템’ 풀리고 있나

도내에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오염된 음식과 물 등으로 인해 구토와 설사 등을 동반하는 식중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서 발병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감염병관리지원단이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2023년 12월30일까지 최근 4주간 32명 발생해 직전 4주(7명)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강원지역 내 5개 표본감시 결과로 실제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포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장관감염증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집단 식중독은 대표적인 후진국형 사고다. 대한민국 대표 겨울철 관광지인 강원자치도에서 마땅히 추방돼야 한다.

최근 평창군 장평리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 화재가 발생한 이후 가스 누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일 새벽 1시21분께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평창휴게소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이용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을 통해 사고 내용을 접한 휴게소 관계자가 건물 뒤편의 가스저장시설

배관에서 누출을 확인하고 밸브를 차단했다. 강릉과 춘천에서도 가스 누출 사고가 잇따랐다. 같은 날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주택의 LPG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 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춘천시 석사동의 한 아파트 가스보일러 배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 일가족 3명이 중독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밖에 대형 유원지 놀이시설이나 스키장 곤돌라 사고, 겨울철 산행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도내 곳곳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겨울 축제가 열리고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릴 후인 19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어서 안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공공장소, 산업현장, 가정 등 도처에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제자리라면 큰일이다. 안전 사고가 날 때마다 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한다고 하지만 유사한 안전 사고들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안전불감증은 아닌지 철저히 되돌아볼 일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09일 (화)

사설/칼럼 19면

용문~홍천 철도, 지방소멸 막기 위한 '국가 인프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예타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 16년 만에 다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어렵게 잡은 기회를 이번에 놓쳐서는 곤란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상반기부터 이 철도에 대한 예타를 실시한다. 용문~홍천 철도는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 홍천읍까지 32.7km의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타 통과 시 2027년부터 2034년까지 총 사업비 8,442억원이 투자된다. 68년 전인 1956년 서울에서부터 용문까지 철도가 놓였다.

그러나 용문으로부터 불과 30여km 떨어진 홍천까지는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로가 단절된 상태다. 이에 홍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철도가 지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전국 27곳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포함되고 대중교통의 오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다. 2007년 예타가 진행되는 등 수차례 기회가 있었으나 번번이 '경제성 부족'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도 낮은 비용편익을 이유로 착공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철도가 완공되면 경의중앙선과 연결돼 홍천~청량리는 1시간대로 주파하게 된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여기 예타 지역경제 9,786억원, 국가 전체로는 무려 1조5,

84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철도는 홍천군민의 100년 이 넘는 염원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이 될 인프라다. 즉,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춘천에서 원주로 이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순환철도망 완성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접근 철도망 구축을 통해 홍천군은 수도권 시대의 새로운 중심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은 홍천군의 미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며 더 나아가 수도권에 자원과 인구가 집중돼 지방소멸의 현실과 마주한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기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

올 상반기부터 조사, 16년 만에 또 기회 잡아

'공급이 수요 창출한다'는 치밀한 논리 무장을

위해 절실한 사업이다.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이 같은 효용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래 수요'까지 감안,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는 경제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외적으로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소멸 문제는 우리에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던져 주었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에서 경제성이 산출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과 같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기간 인프라를 개선해 줘야 한다.